

영구임대 주변 취학기피·잇단 전학... 학교 문 닫을 판

벼려진 '도시빈민'

(2) 따돌림과의 전쟁

#. 광주시 북구 A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나순심(70·가명)씨는 택시를 탈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 나씨는 택시 기사에게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아닌, 바로 옆 일반 아파트를 불러준다. 나씨는 “영구임대아파트 가자고 하면 아파트 흉을 보는 택시 기사가 있는가 하면, 텁미리로 쳐다본다”며 속상해했다.

#. 이성희(62·가명)씨는 시내버스를 탈 때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300m이상을 걸어 한코스를 내려간다. ‘영구임대아파트=빈민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탓에 주변 시선

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더욱 심하다. ‘지역사회와의 비행 청소년’이란 편견을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역 사회의 차별과 따돌림의 ‘벽’은 높다. ‘빈곤층’이라는 멀시 가득한 시선은 ‘가난의 탈출구’를 찾지 못해 벽을 거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자괴감만 더해준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영구임대아파트는 모두 10개 단지로 ▲ 서구 3개 단지(3416세대) ▲ 북구 5개

“홍 볼라” 택시타면 옆 아파트 가자 거짓말

주변 주민 “집값 떨어진다 옆으로 오지마”

눈치보며 300m 걸어가서 버스 타기도

단지(710세대) ▲광산구 2개 단지(3384세대) 등 모두 10개 단지다.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1만3920세대(2만7079명)에 달한다.

대부분 하루하루를 힘들게 베푼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로, 이들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것도 버거운 형편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멀시와 천대까지 감내해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일대에는 지역사

회나 이웃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 인접한 ‘일반아파트’ 주민과의 교류는 몇몇은 교도소 담장 만큼이나 높기만 하다.

광주시 북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와 일반 민영아파트 주민과 함께 다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의 자녀를 영구임대아파트 아이들과 함께 공부시키기 싫어 전학을 시키는 통에

취학 아동 수는 지난 2007년 371명에서 지난해 180명으로 급감하는 등 매년 끊임없이 줄고 있다.

올해도 애초 17명이던 입학 학생 수가 14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를 피해 미리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수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북구청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광주 상무소각장 인근 현대·금호 대우·호반아파트 주민들은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소형임대아파트(1만 5495㎡·786세대) 건립을 대놓고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임대아파트가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도 자신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숨기려한다. 지역 사회가 이를 입주민들에게 주는

부당한 차별, 따돌림뿐 아니라 자칫 아이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가난한 아이들’이라는 ‘낙인’(烙印)을 찍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슬럼화(化)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여의치 않는 것이다. ‘언젠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 상실감만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 A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문수(70·가명)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찾아야 단지내 놀이터에서 바둑을 두던 중, 술을 마신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벌어져 경찰서까지 다녀 왔다”며 “친구들조차도 내가 사는 임대아파트에 오길 꺼린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용참 (8771)
김종우



캠핑 70대 둘 숨진채 발견

11일 오전 10시께 고흥군 포두면의 한 공원 잔디밭 텐트 안에서 장모(76·여)와 강모(78·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침낭을 덮고 휴대용 가스히터를 틀어 놓은 채 잠든 모습으로 발견됐으며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각각 대전과 충남 논산 출신인 장씨와 강씨는 지난 2일부터 해남으로 여행을 왔고 도중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 7일 가출신고가 접수됐다.

/고흥=주종중기자 giju@

‘유혹비 미련하려’ 차안 현금 습작

○…차 안에 가방을 놓고 식당에 들어간 손님의 차를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4·여)씨는 지난달 1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호남동 A식당 앞길에 주차된 김모(35·여)씨의 승용차에서 현금 10만원이 든 손가방을 물레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15회에 걸쳐 3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짐짓 장치가 된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들畋(?)을 이용해 부순 뒤 금품을 가져갔는데, 경찰에서 “유혹비를 미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우리 동아리 들어오렴

신학기를 맞은 1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에서 동아리 회원들이 동아리 소개 유인물을 나눠주며 신입회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비정규직에게도 떡값 받은 교장

광주시교육청, 교사 등에게 170만원 받은 초교 교장 직위해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들로부터 ‘설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11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A초등학교 B교장이 교직원들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징징계를 요청했다.

B교장은 해당 학교 교사 13명과 비

정규직 직원 2명으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상자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 학교에 부임한 B교장이 교직원들에게 육설 등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금품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가 시작되자 B교장은 받은 현금과 선물 등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날 B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예정이다. 금품을 준 교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제공한 또 다른 피해자로 보고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B교장은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했지만, 강제 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3대 역점과제로 청렴을 강조하는 등 교직사회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 교육계의 금품수수 관행은 쉽게 균열되지 않고 있다.

장희국 교육감 체계에 들어서 금품 수수로 징계받은 건수는 2011년 15건(교원 10, 행정 4, 사립교원 1건), 지난해 6건(교원 4, 행정 1, 사립교원 1건) 등 21건에 달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취임 이후 청렴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런 사건이 또 벌어져 안타깝다”며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총학간부가 총장 약점 잡아 해외여행

순천제일대 파장 계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제일대 교비횡령 사건과 관련, 이 학교 총학생회장단이 이를 이용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혐의(공갈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총학생회장 김모(37·여)씨는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과정에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총장의 미술품 구입사건을 알고 학교측에 압력을 넣어 총학생회간부들과 함께 같은 달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을 다녀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1인당 여행경비 250만원, 응돈 360만원 등 교비·학생회비 등으로 2250만원이 사용된 데 주목, ‘총장 약점을 잡아 협박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총학생회단

에 대해 매년 국내외 연수를 해오고 있고 당시 연수도 연례행사의 일환이라는 입장은 보이고 있다.

이 학교 총학생회는 “전임 회장단 문제이고 사설관계를 잘 몰라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도 이날부터 제일대에 대해 2주간의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배경은 이번 총장 비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학교 측은 사립학교에 대해 매년 3~5월 실시하는 정기감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도 이날부터 제일대에 대해 2주간의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배경은 이번 총장 비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학교 측은 사립학교에 대해 매년 3~5월 실시하는 정기감사라고 설명했다.

/순천=김은경기자 ejkim@

“50대 자살 내몬 체불 사업 주 구속해야”

민주노총 건설노조 촉구

주 구속 ▲해당업체에 대한 노동청 특별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3000여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며 60m 타워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부려 먹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가 칼만 안든 강도라면 이를 방관하고 감독을 게을리한 노동청은 범죄교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CJ 헬로비전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 국내 최다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불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리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자상파방송



www.cjhellobision.com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